"국민의힘 헛발질"…민주당 '대장동 의혹' 대대적 반격

"고발사주 의혹 덮기 정치공세"
"연결고리 없어"…이재명 엄호
당 차원 기구 설치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대대적인 반격을 펼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화천대유라는 부정부패 사건과 고발사주라는 국기문란 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두 사건에 빠짐 없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며 "그럼에도 야당 지도부는 침묵하며 '침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수용 국감 손피켓' 시위에 대해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아니면 말고'식 국감, 지라시 국감을 국민들은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병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와 직접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며 "고발사주 의혹 등 윤 전 총장의 흠결을 덮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봤다.

여권은 국민의힘 관련자들을 겨냥해 대장동 의혹의 자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대장동 개발의 본질은 이 후보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에 있다며 이 후보 띄우기에도 주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로 생기는 이익이 소수의 개발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며 "본질이 가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병원 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이 후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엮으려는 것은 보수언론의 지나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돈이 누구에게로 갔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드러났다"며 "대장동 의혹에서 돈이 국민의힘으로 흘러간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에서는 윤 전 총장이 수혜자였다"고 꼬집었다.

장경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등장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높은 분들"이라며 "결국, 보수 정당과 법조계를 옥죄는 국민의힘의 헛발질로 드러날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기구 설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송영길 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당내에 바로 대장동 관련 TF, 국민의힘 토건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TF를 구성할 경우 국토교통위나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등 어느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 캠프의 대장동 TF 분들이 사안을 잘 알고 있어 일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오늘 최고위서 '무효표 논란' 종지부 찍는다

선관위원장 "0.01% 차이도 따라야"
정세균·김두관 의원 결과 승복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이재명 후보가 '턱걸이 과반'으로 대선후보로 선출된 경선 결과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 이의제기에 대해 "13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0.01%p 이겼어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에 하차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이광재 의원도 11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일제히 '경선 결과 승복'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당 선관위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 전 대표측이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당규 규정을) 법률가들과 제가 검토해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며 "사퇴 후보들에게 이미 투표한 것을 무효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뀔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측은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 후보가 1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불발됐을 것이라면서 표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선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김두관, 정세균 후보 두 분 모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라며 "우리 당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전국 권리당원 중 전남·광주의 0.23%만을 빼면 모두 50% 넘게 이 후보가 이겼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면 민주당 스스로 이것 하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낙연 후보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산 증인이시고,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당 대표를 지낸 분이라 당 전체를 위해 결단하고 승복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국감후 지사직 사퇴…대장동,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는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대통령 후보로 뽑히더라도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과거와 달리 180도 태도 바꾸어서 100% 공공개발을 해야 했다고 적반하장을 해서, 이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검경, 대장동 신속·철저히 수사하라"

"진실규명에 총력 기울여 달라"
靑 "이재명 면담 요청 협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그 파문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패한 것을 보며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청와대가 인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전부터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며 "대장동 문제가 경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말을 아껴왔던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어지면서 이날의 '철저한 수사' 메시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점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 수사가 생각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원론적 분석도 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면담 요청 사실을 공개한 만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만남이 이뤄질 경우 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면담이 이뤄진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 논란이 매듭이 지어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